

다산포럼



김태희  
실학박물관 관장

조국을 넘어

토록 큰 문제나. 이런 분위기는 마침내 지난달 28일 토요일 서초동 집회로 표출됐다.

이런 반발에는 과거 검사와 악연이 있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학습효과가 작용한 듯하다. 조국에 실망했던 사람도 검찰의 기세에 자극받아 검찰 개혁의 대의를 위해 조국을 지켜야 한다는 강경 대열에 합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반론도 여전히 만만치 않다. 문제인 장관 지지자 사이엔 분열상을 보인다. 왜 조국이나, 인제가 조국밖에 없나? 조국은 이미 무능을 드러낸 것 아니냐? 조국과 검찰 개혁을 분리해야 한다. 서초동 집회는 이런 반론을 향한 세 과시와 선택 강제의 측면도 없지 않았다.

또 다른 광장인 광화문에서는 야당과 일부 종교단체가 주도한 세 과시가 있었다. 결국 광장이 조국 찬반을 둘러싼 세 대결과 진영 간의 기 싸움 양상으로 발전했지만, 양쪽이 모든 시민을 포섭하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사안의 복잡성이 쉽사리 일도양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국 사태는 입시제도를 비롯한 우리 사회의 다양한 쟁점을 드러냈다. 그런데도 검찰 개혁과 조국의 거취 문제가 블랙홀처럼 다른 이슈를 빨아들이고 있다.

두 달간 조국 문제로, 경제-환경 및 홍콩 민주화 시위 등 여러 세계적 이슈도 소홀히 하고 있는 느낌이다. 광장의 모습을 보며, 소는 누가 키우나 하는 격정 이 드는 건 자연스럽다.

그런데 정치인이어야말로 제구실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매사 사법권이 관여하게 된 것은 정치의 실종에 따른 것이다. 검찰 개혁을 위해 서초동에 갔다면, 정치 개혁을 위해 여의도에 가야 할지 모르겠다.

공직자에 대한 도덕성은 어느 정도 요구되어야 할까. 조선시대에는 대단히 높은 도덕성을 요구했다. 한때 조선시대 연구자로서 이에 대해선 양면적 생각을 갖고 있다. 한편으론 도덕성 요구가 과도하거나 허구적인 면이 있었다는 생각이다. 도덕성 강조의 분위기가 속에서 실제적 민생 대책이 소홀했던 점도 간과할 수 없다. 다른 한편으론 그 정도 도덕성을 요구하는 사회였기에 그렇거나마 장기적으로 지배 질서를 유지했다는 생각도 든다.

공직자에 대한 도덕성 요구를 아주 접을 수 없지만, 공적 기구의 구성원으로 도덕적 인간만을 전제할 수는 없다. 제도적 지혜를 발휘해야 한다. 권력이란 남용되기 쉽고, 스스로 확대하는 속성이 있

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하도록 하는 것이 제도에 대한 인간의 지혜다. 검찰 개혁도 권한 약화가 목표일 수 없다. 필요한 기능과 권한을 유지하면서도 안팎에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요체일 것이다.

지난 토요일의 서초동 집회에는 광화문 집회와 경쟁하듯 전주(前週)보다 더 많은 인원이 나왔다고 한다. 광장의 세 싸움을 관건적 전투로 인식하고 총력을 결집하는 양상이다. 하지만 전투에서 이기고도 전쟁에선 질 수 있다. 또한 세상 일은 물극불반(物極必反)이라 했다. 세 과시에 함몰되지 말고,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어야 한다.

문재인 정권은 국가 폭력의 상처를 어루만지고 남북 대화에 적극적인 통합 정치의 행보를 보여왔는데 높은 지지율을 과시했다. 한쪽의 힘을 빌려 한쪽을 제압하는 것은 반드시 비용을 치를 것이다. 공동체를 아우르는 공동의 가치를 제시하고 함께 추구하여야 한다. 기왕 힘을 받은 검찰 개혁을 제대로 추진하는 한편, 분열의 정치를 벗어나 통합의 정치로 나아가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했으면 한다.

교단에서

개선된 학교 폭력 법률



김진우  
일신중 교감

이었다고 한다. 신고를 받고 급파된 경찰이 100여 명이었는데 한 언론에서 '중학생 70명, 경찰 100명 대치'로 제목을 뽑아 순간 전국 이슈가 된 일이 있었다. 노래방에서 초등학생 한 명을 일곱 명의 중학생이 폭행하여 피범벅이 된 모습이 적나라하게 공개되어 형사 처벌을 받지 않고 보호 처분을 받게 되는 축복소년(10세 이상 13세 미만)의 나이를 더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많아지고 있다.

연초에 예고된 '학교 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 지난 8월 일부 개정되었다. 많은 교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었다. 학교 폭력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2004년 이 법률이 제정된 이후 몇 차례 일부 개정이 있었으나 그 기간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하지만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일부 조항은 9월부터 바로 시행)되는 이번 일부 개정안은 현장의 의견이 상당히 반영된 개선안으로 보인다. 독자들 중에는 초·중등학생이 있는 가정은 물론이고 친인척, 직장 동료나 이웃의 자녀가 학교 폭력의 피해자 또는 가해자로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기에 딱딱한 내용이지만 개정안을 공유하기 위해 정리해 보았다.

'학교 자체 해결 제도'를 신설하였다.

피해 학생 및 보호자가 학폭위 개최를 원하지 않고 '2주 이상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 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학교 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 제공 등에 대한 보복 행위가 아닌 경우' 이 네 가지 조건이 모두 만족하면 학교 전담 기구의 확인·심의를 거쳐 학교장이 자체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9월부터 바로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매우 교육적인 조항이라고 생각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기도 한다.

지금까지 학폭위 조치에 대해 은폐나 축소 시비가 많았는데 앞으로 학교장이 교육적으로 자체 해결하는 경우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자체 해결 후에도 피해 학생 측에서 학폭위 개최를 요구하면 다시 학폭위를 열도록 보완책을 마련했다.

지금까지 많은 학교 폭력 사안들을 학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매우 경미하거나 이미 학생, 보호자 간에 화해가 과거 같 지내는 경우라도 학폭위를 개최하는 사례도 있었고, 직무 유기 등 예상하지 못한 경우를 대비한 경우도 없지 않았다. 학폭위가 열리면 학부모의 학교방

문 발걸음은 천근만근이고, 피해 학생이든 가해 학생이든 학폭위에 참석한다는 것 자체가 또 다른 마음의 상처이다.

학교 사안을 심의하기 위해 학교에 두었던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를 폐지하고 각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대책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이관하게 된다. 전문성을 높이고 일관성 있게 처리하여 가해·피해 학생 조치에 대한 불만과 불복을 줄이기 위함이다. 급증하고 있는 학교의 학폭 업무가 조금 덜어질 것으로 보인다.

학생 불복 절차를 일원화하여 조치에 불복할 경우 교육청에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금까지는 피해 학생은 시·도청에 설치된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가해 학생은 교육청의 '학생징계 조정위원회'에 재심 청구를 하였으나 앞으로는 바로 행정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불복 절차를 일원화·간소화하였다.

어울리지 못하고 혼자 다니는 학생이 늘어가고 있다. 가장 큰 고민이 점심을 함께 먹을 친구가 없다는 학생도 있다. 피해 학생이었다가 가해 학생이 되는 사례도 있다. 교사가 가르치는 일 못지않게 보살피는 손길이 더 필요한 시대이다.

기고

우리의 자랑 '한글'



이동범  
수필가·교육 칼럼니스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이기까지 하다. 둥근 모양은 하늘을 본뜨고, 평평한 모양은 땅을 본떴으며, 일어서 모양은 사람을 본떴다. 그래서 '천지인(天地人)'의 철학을 담은 우수한 글자라고 칭송을 받고 있다.

이처럼 우리 한글은 모든 언어가 꿈꾸는 알파벳이라고 한다. 영국의 언어학자 제프리 샘슨(Geoffrey Sampson)은 "한글을 인류의 위대한 지적 유산 가운데 하나"라고 하였다. 이러한 연유로 세종대왕의 창제 의지를 담은 '훈민정음' 서문은 국보 제70호이자 1997년 유네스코가 선정한 세계기록유산 중 하나가 된 것이다.

이렇듯 우리 한글은 우리 스스로 필요한 글자를 만드는 '자주정신(自主精神)', 백성을 사랑하는 '애민정신(愛民精神)', 널리 글을 알리 사람들의 생활을 이롭게 하겠다는 '실용정신(實用精神)'이 녹아 있는 자랑스러운 우리 글인 것이다. 오늘날 한국은 한글 덕분에 세계에서 문명들이 낮은 나라에 속한다.

유네스코에서는 세계문화유산 지정과 세종대왕 탄신일을 '세계 문맹 퇴치의 날'로 정했으며, 1989년 '세종대왕상'(King Sejong Prize)을 제정하여 문맹 퇴치에 공헌한 세계 각국의 유명 단체에게 시상하고 있다.

21세기에 언어는 강한 경제적 가치가 있다. 컴퓨터에서는 한글의 업무 능력이 한자나 일본어보다 7배 이상 경제적 효과가 있다고 한다. 한글이 세계에서 가장 과학적인 표기법 체계를 가진 덕분이다.

세계의 문자 중에서 창제 이유와 근거, 만든 날짜와 만든 사람이 밝혀진 문자는 한글이 유일하다고 한다. 우리는 이렇게 훌륭한 우리의 말과 글의 소중함을 모르고 지내 온 감이 없지 않은 것 같다.

우리 말과 글이 훌륭하고 아름답게 표현할 수 있음에도 어려운 외래어를 분별 없이 남용하거나 신조어, 비속어 등을 함부로 사용하는 것은 우리 글의 발전을 저해하는 일이며, 우리가 고쳐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우리 글과 말이 일제 강점기의 침략자들에 의해 수난을 겪었던 일을 생각하면 통탄을 금할 수 없다. 그들은 우리의 민족정신을 말살하고 식민화하기 위해서 창씨개명까지 강제로 시켰다. 우리의 글을 쓰지 못하도록 강압당한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

3·1 운동 100주년을 맞고 보니 더욱 그들의 잔학무도(殘虐無道)한 처사를 규탄하지 않을 수 없다. 전방들이 사죄는 커녕 경제 보복까지 자행하고 있음은 볼 때 우리 국민들은 다시 한 번 굳게 뭉쳐야 하지 않겠는가?

한글날을 맞이하여 우리는 훌륭한 문자인 한글을 가지고 있음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한글을 더욱 잘 다듬고 야기면서 구어어 나갈 것을 다짐해야 한다. 세계에서 인정된 훌륭한 한글을 가진 민족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우리의 자랑인 한글을 더욱 발전시켜 세계 공동어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국민 모두의 노력과 함께 정부의 지원을 적극 기대한다.

社說

한국당 의원들 한전공대 반대 속내 뵈는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한전공대 설립 반대 움직임에 대한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가 미래 성장 동력인 에너지산업 활성화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한전공대 설립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호남만의 대학이 아니고 세계 에너지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 백년대계인 만큼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당 광대훈 의원은 지난달 한전공대 설립에 한성이 투자할 수 없도록 하는 '한국전력공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정부가 전력산업기금을 활용해 운영비를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국당은 지난 6월에도 국회 산하위 소속 의원들이 자주 한전 본사를 방문해 한전공대 추진 중단을 요구했고, 8월에는 10여 명의 의원들이 반대 성명을 내기도 했다.

반대 이유로는 한전의 적자와 전국에 상당수 특성화대학이 운영되고 있는 점, 정부의 탈원전 정책 등을 들고 있다.

이에 대해 한전공대 광주·전남 범시도

민 지원위원회와 광주·전남 5개 상공회의소는 그제 각각 성명서를 내고 "국가 차원의 에너지 분야 우수 인력 확보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한전공대 설립은 반드시 추진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호남만의 대학이 아니고 세계 에너지시장 선점을 위한 국가 백년대계인 만큼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국당 의원들의 한전공대 반대 공세는 지역 갈등을 조장해 정치적 익숙을 쟁기려는 정략적 의도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대학 설립과 운영에 드는 자금은 정부·지자체·한전이 분담하기로 했기 때문에 글로벌 기업인 한전에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안길 정도는 아니다.

오는 11일로 예정된 한전에 대한 국정 감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에서도 한국당이 계속 이것저것을 놓는다면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이다. 정부와 한전, 지역 정치권은 이에 대해 철저하고 분명하게 대응하면서 대학 설립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부실 원전 보수에 수백억 들여야 한다니

한빛원전이 재가동 승인 후 3개월 이내에 30번이나 멈춰선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에서 제출받은 '가동원전 재가동 승인 이후 원전 정치 현황'을 분석한 결과 밝혀졌다.

원안위는 정기적인 원전 안전성 점검을 통해 재가동 승인을 하고 있는데 전국적인 통틀어 사고는 고리 2호기 26건, 한빛 2호기 17건, 월성 1호기 15건, 고리 3호기 14건, 한빛 1호기 13건 등 21개 원전에서 148건이 발생했다.

특히 한빛 1호기처럼 재가동 승인 하루 만에 정지된 경우도 6건이나 됐다. 재가동 승인 후 10일 내 정지한 경우는 55건이었다.

철관 부식 등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도 여럿했다. 노후대 더불어민주당 위원이 공개한 원안위 자료에 따르면 원전 13기 격납건물 내 방사능 유출 방지용 내부철

판(CLP) 결함 부위가 올해 7월 21일 기준 9998곳이나 발견됐다. 이 중 한빛원전 1호기가 2380곳으로 가장 많았고 한빛 2호기도 1643곳이나 됐다.

CLP는 원전 격납건물 콘크리트 외벽과 함께 폭발 등 사고가 일어났을 때 1차 방호 역할을 하는데, 부식 등으로 두께가 얇아지면 교체나 보강 등 보수작업을 해야 한다. 문제는 보수·점검 비용으로만 수백억 원의 혈세가 소요된다는 점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의 한 자료에 따르면 공극 245개와 CLP 결함 120곳이 발견된 한빛 3·4호기의 점검·보수 비용은 모두 586억 원으로 책정됐다.

언제까지 불안이 떨며 현재까지 낭비해야 하는지. 이쯤 되면 처음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원전 재가동 승인도 부실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원전 안전에 직접 관여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

無等鼓

무등산 자락에 자리한 의재미술관 2층 입구에 있는 낡은 나무 현판 하나. 한쪽 면에는 오방정(五放亭), 다른 면에는 석야정(石野亭)이라 각각 새겨져 있다. 여기에는 오방 최흥종(1880-1966) 목사와 석야 최원순(1896-1936) 그리고 의재 허백련(1891-1977) 등 세 분의 자취가 서려 있다.

석야는 일본 와세다 대학 정치학부 유학 시절 '2·8 독립선언'을 이끌어 내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인물이다. 동아일보 기자로 활약하면서 1926

년 8월 22일자에 실린 가시 기사 '횡설수설'에서 일제 통치를 신랄하게 비판해 필화(筆禍)를 겪기도 했다. "현하(現下)의 총독정치는 조선인을 이(利)케 하고, 익(益)케 하는 인사는 박해하고 배척하면서, 조선인을 해(害)케 하고 불리케 하는 놈들은 절대적으로 보호하는 방침이라고 시고(是故·그러므로). 말(曰) 총독정치는 약당 보호정지라고."

이후에도 석야는 정치부장과 편집국장 대리를 맡아 활동했으나 옥고(獄苦)를 치르며 건강을 잃었고 고향인 광주로 내려왔다. 이때 호남 최초의 여의사인 부인

현덕신(1896-1962)이 남편의 요양을 위해 무등산 밑에 집을 지었는데 이곳이 석야정이다. 이후 최흥종 목사가 거쳐하면서 오방정이 됐고, 해방후 의재 선생이 개축해 춘흥헌(春興軒)으로 바뀌었다.

오방 최흥종 목사는 가난한 사람과 한센병 등 병든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성자(聖者)의 삶'을 실천했는데 석야와 함께 1933년 광주에서 '계유구락부'를 조직해 민중 계몽 운동과 빈민 구제 활동을 폈다. 또한 오방과 의재는 1949년 삼애(三愛)학원을 설립해 농업지도자 양성과 교육 사업에 발 벗고 나서기도 했다.

오방, 석야, 의재의 '항기로운' 삶을 돌아보는 전시가 '무등, 시대의 스승을 품다'라는 주제로 의재미술관(10월 31일까지)에서 열리고 있다. 오는 10월 24일에는 이들의 손자인 최철 광주 YMCA 이사장과 최영훈 전 조선대 미술대학장, 허달재 의재문화재단 이사장의 토크 콘서트 마련된다. '광주의 큰 어른'일 뿐만 아니라 '시대의 스승'이었던 세 분의 삶과 사상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다. /송기동 문화2부장 song@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金日煥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국무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3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